

시민불편 없는 청소행정 추진

정원문화 거점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전주시, 내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화 수거체계 시행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종류별로 이뤄졌던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이 내년 4월부터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권역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전주시는 성상별 수거 체계에 따른 잔재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화 수거체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해 각각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종류별로 수거하는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잔재쓰레기가 길거리

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인력과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부터 가로·노면 청소로 이르기까지 권역으로 묶어 청소를 하는 권역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새로운 업체 선정 등 사업 준비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전주를 8개의 권역으로 나눠 수거가 이뤄지는 권역화 수거체계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새벽수거가 사라지고 주간근무로 전환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에 근무해 안전해지고 휴식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원가산정 용역 결과 근로자수 428.33명, 차량 167.26대로 산출됐는데, 이는 수거노선 중복차량 제외 등으로 약 33.74대의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준비돼 왔던 권역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가 본 계획에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불편 없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내년 6월까지 18억원 투입 중화산동에 지상 2층 규모 건립

전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거점공간인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에 착수한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중화산동 중산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물을 증축해 '전주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 정원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민의견 수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상 2층, 연면적 409㎡ 규모로 건립되는 전주 정원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거주 공간 내 머무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시민들의 정원 관련 인프라 및 정보제공 수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교육장 △온실정원 △정원도서관 △정원소품판매장 △주민 공유공

간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정원문화센터에 들어서는 교육장과 온실정원은 정원관리 이론·실습 교육장으로 활용되며, 정원도서관은 정원 관련 서적들이 비치된 정원 전문 도서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정원소품판매장은 정원 관련 각종 재료나 소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주민 공유공간은 지역 주민 소통 장소와 함께 발표회나 전시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정원문화센터 운영은 시가 직접 맡을 예정으로, 전만그루정원도시와 정원문화산업업이 센터에 입주해 현장 시범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전주 정원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에게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이끌 거점시설로 활용에 나갈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정원문화센터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전주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감도.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 7일까지 142명

전주시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재선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

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게 되며, 65세 미만 일반 사업에는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총 60여 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타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 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면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방제대책 가동

예방나무 주사·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 추진

전주시가 '소나무 예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진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소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을 마련한 시는 감염목 반경 2km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드론항공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 반경 5km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

시한 상태다.

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 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입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빨간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검토·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방제작업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발견하거나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전주시 산림복지과(063-281-25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민 공람

10일까지 7개 지구 4000필지 대상

전주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공부상과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9억9000여 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사업대상지역인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0필지(124만7000㎡)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내년도 대상 지구는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7곳으로, 시는 이달 내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예정)으로 개최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대상지에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지구, 4919필지(198만9000㎡)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15개 지구, 6911필지(336만2000㎡)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